

9차시[피해자가 장애학생인 경우, 일반학생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학습목표>

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학생 및 장애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의 종류와 내용 및 치료를 위한 요양비용과 피해학생에 대한 불이익금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종류와 이행 및 치료를 위한 요양비용과 불이익금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자치위원회의 의결을 학교장이 수정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하할 때 피해학생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에 대해서 알아본다.

<사례>

사건의 개요

문] P시 소재 J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A는 뇌병변 장애2급의 장애인이다. 2011. 10. 12. 점심시간 때 같은 반 친구 B, C, D, E 등이 게임을 하고 있던 중 B가 게임에서 져서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게임을 구경하던 A가 자신을 보고 비웃는 것으로 잘못 알고 "웃지 말고 가라"고 하였다. 그러나 A는 B가 자신에게 말하는 것인 줄 모르고 그 자리에서 계속 게임을 구경하고 있었다. 이에 B는 A가 친구들 앞에서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A의 얼굴과 배, 머리를 10대 정도 발로 차면서 "너 갈비뼈 부러져야 정신 차릴래? 선생님께 말하면 죽을 줄 알아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교실 안에 있던 다른 친구 M이 즉시 담임선생님 T에게 알렸다. 다음 날 담임선생님 T가 B를 불러 A를 괴롭히지 말라고 하자, B는 그날 점심시간 때 M을 화장실로 불러내어 "네가 선생님에게 고자질 했느냐?"면서 주먹을 휘둘러 M에게 코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가했다. J 중학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한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는 피해학생 M의 보호자에게 M이 얼마나 다쳤는지, 그리고 치료비가 얼마나 들었으며, 향후 치료비는 얼마나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지에 대하여 진단서 등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였으나, M의 보호자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처지라 병원에 진단서를 발급받으

러 갈 시간이 없다고 하였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는 가해학생인 B학생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10일, 출석정지 10일, 특별교육이수 10일의 조치를 의결하여 J중학교 교장에게 조치를 요청하였고, J중학교교장은 자치위원회가 의결하여 요청한 대로 조치를 결정하여 B학생 및 B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하였다.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인 A학생에 대하여는 치료를 위한 요양, 전학권고조치를 의결하였고, 또 다른 피해학생 M에 대해서는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조치를 의결하여, J학교의 장에게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였다.

자치위원회의 조치 요청을 받은 J중학교의 장은 피해학생 A에 대해서는 전학권고조치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자치위원회가 의결한 사항과는 다르게,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를 위한 요양 조치를 피해학생 A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취했으며, 또 다른 피해학생 M에 대해서는 M학생 보호자가 학급교체의 경우 M이 원하지 않으며, M이 다른 반으로 갔을 때는 또 다른 학교폭력을 당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학교장은 M학생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치위원회가 의결하여 요청한 대로 조치를 하였다.

J 중학교장이 피해학생 A에 대해서 자치위원회가 의결하여 요청한 조치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타당한가?

J 중학교장이 피해학생 M에 대해서 자치위원회가 의결하여 요청한 조치와 대로 피해학생 M의 보호자의 동의없이 조치를 취한 것은 타당한가?

피해학생 A가 장애학생인 경우이므로, 이 경우는 일반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같이 보호되나요? 아니면 일반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M의 진단서나 치료비 내역 등에 대해서 M이나 M의 보호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사건의 쟁점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학교장이 수정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피해학생 보호자

의 동의 없이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내릴 수 있는지 및 자치위원회에서 피해학생에게 반드시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는 지 및 치료를 위한 요양급여의 경우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 지 여부 및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진단서나 과거 병력 등의 개인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그 범위와 방법이 문제된다.

사건의 결말

뇌병변 장애인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로 뇌성마비, 외상성 뇌 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해 보행 또는 일상생활 동작에 제한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뇌병변 장애는 주된 증상인 마비의 정도 및 범위, 불수의 운동의 유무 등에 따른 팔 다리의 기능저하로 인한 앉기, 서기, 걷기 등의 이동능력(보행상의 장애 정도)과 일상생활 활동(동작)의 수행능력을 기초로 하여 전체 기능장애 정도를 판정하며,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시각, 청각 또는 언어상의 기능장애나 정신지체장애가 동반된 경우는 중복장애 합산 인정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는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조치를 취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J 중학교장이 피해학생 A에 대해서 자치위원회가 의결하여 요청한 조치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J 중학교장이 피해학생 M에 대해서 자치위원회가 의결하여 요청한 조치와 대로 피해학생 M의 보호자의 동의없이 조치를 취한 것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 조치이므로 잘못된 조치이다.

피해학생 A가 장애학생인 경우며, 장애학생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예방 및 사안처리에 있어서는 일반학생과 동일하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해 할 수 있는 보호조치 중 하나인 ‘심리상담 및 조언’ 과 ‘ 치료를 위한 요양’ 이 장애학생에 대해서도 적용되지만 이와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장애학생의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에서는 ‘심리상담 및 조언’ 과 ‘치료를 위한 요양’ 에 대해 일반적인 조치(법 16조) 이외에 장애학생에 대한 특화된 조치(법 16조의 2)를 할 수 있다. 자치위원회에서 요청한 장애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에 대해 학교장은 이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법 제16조의 2 제3항). 일

반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는 학교장이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달리 장애학생에 대해 자치위원회에서 요청한 보호조치에 대해 학교장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 이는 장애학생의 학교폭력피해에 대한 특별보호를 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학생의 경우에는 일반 학교폭력 피해학생보다 더 두텁게 보호되며, 장애학생에 대해 자치위원회에서 요청한 보호조치에 대해 학교장은 반드시 따라야 하는 점이 일반 피해학생의 경우와 다르다.

M의 보호자가 바쁘기 때문에 A에 대한 진단서나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발급받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M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진단서나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전문가 의견

전학권고는 지속적인 학교폭력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또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생긴 정신적 상처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피해학생을 다른 학교로 전학가도록 권고하는 조치로서, 다른 조치로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후로 취하는 조치이다. 피해학생에 대해 전학을 권고하는 것은 지속적인 학교폭력상황으로부터 피해학생을 떼어 놓을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수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새로운 학급 또는 새로운 학교에 대한 적응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므로 전학권고가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로서 실효성을 가지려면 가장 최종적인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교장은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인해 성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피해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보호조치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성적평가 등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일시보호나 치료를 위한 요양조치 등으로 인하여 피해학생이 장·단기간 결석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성적평가를 위한 시험에 응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학교학업 성적관리규정에 의거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1.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학생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 동영상 강의

가. 자치위원회를 개최하기 전 긴급한 경우의 조치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① 심리상담 및 조언, ② 일시보호, ③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

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나.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리상담 및 조언

학교폭력으로 받은 정신적·심리적 충격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 내의 교사 또는 학교외의 전문상담기관의 전문가에게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도록 하는 조치로서, 피해학생이 심리적·정신적 충격을 겪고 있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조치이다. 학교 내 상담교사가 없을 때는 외부 상담기관과 연계한다.

② 일시보호

지속적인 폭력이나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보호시설이나 집 또는 학교상담실 등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③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생긴 신체적·정신적 상처의 치유를 위하여 일정기간 출석을 하지 아니하고 의료기관 등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조치로서 치료기간이 명시된 진단서 또는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자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학부모에게 안내하는 것이 좋다.

④ 학급교체

지속적인 학교폭력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또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생긴 정신적 상처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피해학생을 동일 학교 내의 다른 학급으로 소속을 옮겨주는 조치로서, 피해·가해학생이 같은 학급에 있는 경우 심리적인 불안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피해·가해학생을 분리하기 위한 조치이다.

피해학생 입장에서는 새로운 학급에 적응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므로, 피해 학생이 적극 원하는 경우와 다른 조치로 피해학생 보호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⑥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피해학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다양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치료 등을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법률 구조 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요청, 신변보호지원 등을 할 수 있

다.

2. 학교장의 조치- 동영상 강의

자치위원회는 학교의 장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자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자치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3. 자치위원회의 피해학생 보호조치 결정에 대한 보호자의 동의 여부

가. 피해학생 보호자의 동의

자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당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동의를 없는 경우 당해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따라서 심리상담 및 조언 조치를 내리는 경우에도 수업시간이나 외부 상담기관의 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피해학생 측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학교장이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다른 보호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치를 취할 수 없으므로 자치위원회가 재심의 해야 한다. 이러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보호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보호조치는 피해학생의 보호 및 이후 학교생활의 적응을 위한 것이므로 피해학생과 학부모의 욕구를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특히 전학권고는 피해학생의 욕구를 반드시 확인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피해학생의 보호조치 시 유의점

피해학생은 보통 지속적인 학교폭력의 피해로 인해 학교에 나오기를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학교에서는 피해학생의 상태를 이해하고 피해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하는 게 필요하다.

4. 불이익 금지

가. 출석인정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인해 장기간 학교에 나오지 못했을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학교의 장이 인정하면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나. 피해학생이 등교거부로 결석했을 경우 출석으로 처리해주어야 하나?

원칙적으로 자치위원회의 결과조치로써 피해학생이 치료 및 요양을 할 수 있으나, 자치위원회 소집 전에 피해학생이 등교거부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에도 역시 학교에서는 피해학생이 그 기간 동안 치료를 받은 것이 증명된다면(병원 의사의 진단서 등) 출석일수로 산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피해학생이 심리상담 및 조언이나 그 밖의 보호조치 결정을 받고 결석한 경우 피해학생이 심리상담 및 조언이나 그 밖의 보호조치 결정을 받고 결석한 경우 초·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전산처리및관리지침에 따르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학교장이 피해학생이 심리상담 및 조언이나 그 밖의 보호조치 결정을 받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결석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인정시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라. 성적처리에서의 불이익 금지

교장은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인해 성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피해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보호조치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성적평가 등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일시보호나 치료를 위한 요양조치 등으로 인하여 피해학생이 장·단기간 결석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성적평가를 위한 시험에 응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학교학업 성적관리규정에 의거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마. 학습권 보장

피해학생이 장·단기간 결석하게 되는 경우 교장은 가정학습에 대한 지원 등 교육상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5.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를 위한 요양급여 비용의 부담 문제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에게 ① 심리상담 및 조언, ② 일시보호, ③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

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공제급여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6. 장애학생의 보호문제

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장애학생 보호 규정을 두게 된 경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제정 당시 그동안 장애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 규정되지 않았으며, 장애학생도 학생이기 때문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었다. 하지만 장애학생의 경우 특성상 일반학생보다 더 많은 보호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2009년 5월 8일 법 개정을 통해서 장애학생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였다. 그렇지만 장애학생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예방 및 사안처리에 있어서는 일반학생과 동일하다.

나. 장애학생의 정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는 제5호에서 "장애학생이란 신체적 · 정신적 · 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는 제1항에서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 · 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고 규정하면서,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정신지체, (4) 지체장애, (5) 정서 · 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장애학생 보호 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 16조의 2 제 1항). 학교폭력은 학생간의 폭력사안이므로 결국 학생이 장애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이 내용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누구든지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자체가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점, 장애학생도 비록 장애가 있지만 학교폭력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학생이라는 점을 감안한 장애학생에 대한 선언적인 규정이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여 장애학생이 피해학생인 경우에 자치위원회는 장애인 전문상담가의 상담이나 장애인 전문치료기관의 요양조치를 학교의 장애에 요청할 수 있다(법 제16조의 2 제2항).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해 할 수 있는 보호조치 중 하나인 ‘심리상담 및 조언’ 과 ‘치료를 위한 요양’ 이 장애학생에 대해서도 적용되지만 이와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현행 「초·중등 교육법」 제19조의 2에서는 전문상담교사나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두어 성폭력·진로상담 등 학생들이 직면하는 다른 문제와 함께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조치를 특별히 규정한 것은 현행 제도 이상의 특별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장애학생의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에서는 ‘심리상담 및 조언’ 과 ‘치료를 위한 요양’ 에 대해 일반적인 조치(법 16조) 이외에 장애학생에 대한 특화된 조치(법 16조의 2)를 할 수 있다.

자치위원회에서 요청한 장애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에 대해 학교장은 이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법 제16조의 2 제3항). 일반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는 학교장이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달리 장애학생에 대해 자치위원회에서 요청한 보호조치에 대해 학교장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 이는 장애학생의 학교폭력피해에 대한 특별보호를 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인 법률이다.

7. 피해학생에 대한 진단서나 과거 병력 등 개인정보 제공요청의 법적문제

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10조 제1항). 그러나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정보주체는 처리정보의 열람 등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법 제16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서는 대리인의 범위를 (1)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2)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수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동법 시행령 제19조).

나.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

(1) 개인정보의 정의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3호).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4호).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

(2) 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①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②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

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③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을 요구할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⑤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를 가진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3)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⑤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2항).

(4)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①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

정리하기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당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동의를 없는 경우 당해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자치위원회가 의결을 거쳐 학교장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일정한 보호조치를 요청하였을 때 학교장은 자신의 판단에 따르면 자치위원회의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요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이를 거부하여도 위법이 아니며, 학교장이 거부하였을 경우 이를 강제할 수도 없다.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에게 ① 심리상담 및 조언, ② 일시보호, ③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공제급여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